



농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활로

■ 김정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농업이 한꺼번에 몇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남겨 두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곧 새 해가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데다 우루과이라운드(UR) 때 관세화 유예된 쌀 재협상에도 나서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농업교역조건도 계속 악화되어 금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7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WTO에 가입한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면서 소득작목은 점점 축소되고, 수지 맞지 않는 농사에 후계자가 남지 않아 농촌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근년에는 자연재해도 늘어나 농업경영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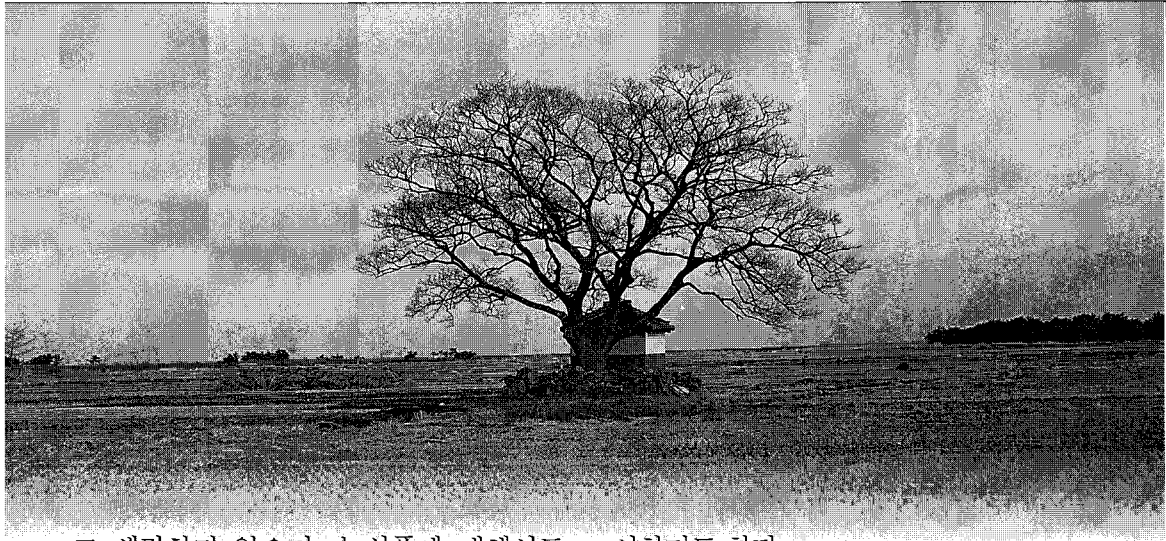
이 즈음에 DDA나 FTA 논의 과정에서

농업이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 돌이켜 보면 UR 때는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농어촌특별세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 농특세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제 농업계가 뭉쳐 위기 탈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제에 대해 공감해야 하는데, 소비자와 납세자 그리고 재계나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부처 및 농업인 사이에도 사실 인식이나 해법에 대해 이견이 많다.

소비자들은 국제시세보다 비싼 우리 농산물에 대해 불만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과거와 같이 국산품 애용을 미덕이라



고 생각하지 않으며, 농식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애국심에 호소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는다. 납세자나 재계는 농업투자에 대해 밀빠진 독에 물분기라는 부정적 시각이 크며, 농업의 산업적 지위나 국민경제적 기능에 비해 정부 재정이 과투입된다고 지적한다. 예산당국은 가격지지나 보조금과 같은 재정지원이 비효율적인 농업을 온존시키고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과보호적인 농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농업계는 묵묵히 경제발전에 기여한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 섭섭하고, 그 동안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담당해 온 역할을 비롯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산품 수출에 따른 국제적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이 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부문이 보상 차원에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대안을 제

시하기도 한다.

농정당국과 농업인들의 오해와 불신의 벽도 두껍다. 언젠는 농사지를 작목까지 정해주더니 이제는 시장기능 운운하며 손을 떼려고 한다고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삼는다. 전업농들은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정책이 후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며, 영세고령농들은 정책지원사업이 대농 위주로 추진되는 등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에 농정이 편향되어 간다고 폄하하여 말한다.

이제 각계의 견해와 주장을 서로 인정하는 대타협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수준 및 발전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농업계가 주장하듯이 우리 농산물 가격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경제외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농정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농업·농촌 다원적기능 낮게 평가, 경제적 효율성 잣대 평가 안될말
정보공개·국회 및 농업단체 긴밀 협의, DDA농업협상 총력 기울여야**

”

한국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재조명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한국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토대로 그 동안 축적된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연조건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조건이며, 이미 과수와 화훼 등은 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생명공학(BT), 전자공학(IT) 등의 첨단과학기술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내 농산물·식품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구매력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산물의 국내시장은 산업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이나 구매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구매시장이 적은 편이 아니다. 또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으로 수출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최근 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셋째,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아갈 새로운 주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영농후계자가 적은 가운데서도 영농의지가 강한 고학력의 청년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정보·지식을 응용하는 신지식 벤처농업인들이 지역농업의 리더그룹으로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농업법인들은 생산·가공·유통의 계열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농업기술 혁신을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전문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및 영농의 기계화·시설자동화는 고령농업인보다는 청장년 농업경영자에게 유리하게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로운 활로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소비자·도시민을 지향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

대하며, 농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 기회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둘째,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측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와 농업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농업인이 선택 가능한 전문화·겸업·탈농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소득보전직불제 등 사회적 보상시스템의 확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와 소비자 유통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 관리기술을 통해 품질을 고급화 하며 대형 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소비자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산지유통의 혁신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형의 재정부담형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하

며, 개별농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나 정부 구매 등 생산과 가격지원 정책 위주에서 탈피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과 재해보험 그리고 영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선진농업의 기초조건이다.

다섯째,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편리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정비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적어도 도농간 생활격차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DDA 농업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협상은 UR에서 정해진 농업개혁 원칙에 따라 시장개방과 보조감축의 폭을 결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며, 더욱이 쌀 재협상과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도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 및 농업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최대한 수렴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